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금산군 선정 촉구 건의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 등에 근거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선순환 유도를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6~'27)'으로 추가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자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위축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핵심 정책이다. 본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추가 공모는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소멸 위험도가 높고 추진 의지와 정책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된 지역으로 금산군이 선정되어야 한다.

금산군은 2024년 인구 5만 명 선이 무너진 인구감소지역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6.6%에 달하며 출생 대비 사망률이 5.5배에 이르는 등 저출산, 고령화로 지역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지역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금산군은 인구감소와 지역발전지수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지역 활력 회복이 절실한 정책 실현 적격지이다. 또한 인삼·약초 등 지역 특화 자원과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 내 경제 순환 구조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금산군은 전 군민 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을 전액 군비로 지급했던 행정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정책효과를 입증할 준비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처럼 금산군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절박함과 함께, 정부가 제시한 일반형 및 지역재원창출형 사업 모델 모두에 부합하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와 같이 가장 필요하고 준비된 지역에서 추진될 때 그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에 금산군의회는 정부가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시 인구감소지수, 지자체 차원의 자체 노력,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산군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금산군을 반드시 선정하라.

하나. 정부는 금산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지속 추진하라.

2026년 4월 30일

금 산 군 의 회